미얀마 양곤 폭풍전야…군 병력 집결

강경 진압 예고…도심 곳곳 장갑차
지난주 비해 시위대 규모는 줄어
수치 신병 처리 시위 향방 가를 듯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이 15일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지난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전날 저녁 항의 거리 시위의 중심지인 양곤으로 군 병력을 이동시키면서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나우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곤시 중앙은행 근처와 중국 대사관 인근 그리고 흘레란 사거리 인근에서 열흘째 쿠데타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북부 지역에서도 공대 학생 수백 명이 도로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현지 영상에 잡혔다. 그러나 시위대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의 한 교민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군 병력이 양곤에 집결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흘레단 사거리의 시위대 규모가 지난 주와 비교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외신 사진에 찍힌 이 날 오전 양곤 시내는 곳곳에 장갑차와 군 병력이 주둔해있는 모습이었다. 이병수 미얀마 한인회장도 "주택가나 시장 등을 오전에 돌아봤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일부 교민분들로부터 어젯밤 장갑차나 군 병력을 실은 트럭들이 시내 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시위가 자주 벌어지는 시내 중심부 '술레 파고다' 근처에는 이날 오전 경찰 트럭 수십 대와 물대포 4대가 배치됐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1시부터 군정이 차단했던 인터넷은 오전 9시를 기해 다시 접속이 가능해졌다.

한편 군정이 가택 연금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법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시한이 이날까지라는 점도 정국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군정은 지난 3일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하고, 이를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로 기소해 이날까지 수치 고문을 구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 수치 고문이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항의 시위가 더 격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중심가에 배치된 군 장갑차 주변에서 15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 군정은 전날 장갑차를 탄 병력을 양곤 시내로 이동시키고 인터넷을 사실상 전면 차단했다. 현지 언론은 쿠데타 항의 시위에 대한 군정의 강경 진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애플카, 닛산과도 협상 결렬…브랜드 이견"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협상이 일본의 닛산과도 이견 때문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 내용을 인용해 15일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양측간 접촉은 짧았고, 논의가 고위 경영진 수준까지 진전되지도 못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은 '애플' 브랜드 사용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서는 애플이 애플카를 추진하면서 기술 공유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자동차 제조협력사들은 애플을 위해 아이폰을 단순 조립하는 대만 업체 '폭스콘'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왔다.

앞서 애플카의 협력 대상 제조사 가능성이 거론돼온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애플카' 생산과 관련해 애플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차와 기아차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연합뉴스

미 의회, 의회폭동 규명할 9·11식 조사위 추진

"원인 밝혀 재발 막자" 초당적 목소리
트럼프 책임 물을 마지막 기회 주목

미국 의회가 의회폭동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할 초당적 특별조사단 구성을 추진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이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조사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들린 딘(민주·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조사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폭스뉴스에 나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9·11식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원에서는 고위직이 아닌 민주,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폭동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은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가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를 여객기 자폭으로 공격한 9·11테러 뒤 초당적 조사위를 발족한 바 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조사위 설립 법안에 2002년 서명하며 테러 원인과 예방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9·11 조사위는 20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정보수집 공조와 의회의 감독 방식을 크게 바꿀 60여개에 달하는 권고를 내놓았다.

의회폭동 조사위가 구성되면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으나 전날 상원 표결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여야 견해차 때문에 불신임 결의안이나 향후 공직출마를 차단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안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회 난입사건을 부른 행정, 법집행 실패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할 수단으로 조사위를 주목했다.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이 들어야 하고 들을 자격이 있는 증거가 아직 더 남아있다"며 "조사위는 의회가 계속 돌아가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책임이 있는지 기록을 노골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년 12월 우한에 이미 코로나변이 13종 있었다"

CNN, WHO조사팀장 인용 보도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국 현지 코로나19 조사팀이 2019년 12월에 우한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감염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징후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을 때 이미 유전자 서열이 상이한 13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CNN이 WHO 우한 현지조사팀장을 인용해 전했다.

WHO 우한 현지조사팀을 이끈 페터 벤 엠바렉 박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2019년 12월에 광범위하게 돌고 있었다"면서 "이는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재작년 12월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 이상이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엠바렉 박사는 WHO의 식품안전·동물질병 전문가로, 최근 중국에서의 조사 임무를 마치고 WHO 본부로 복귀했다.

특히, WHO 조사팀은 이번에 최초로 13종의 유전자 서열이 상이한 바이러스 데이터를 중국에서 확보했다고 엠바렉 박사는 밝혔다.

그는 이 데이터를 2019년 중국의 광범위한 환자 임상데이터와 함께 분석하면 그해 12월 이전의 감염에 대한 지리적 정보와 바이러스 발생 시기 등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이바이러스가 이미 2019년 12월에 13종이 존재했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훨씬 전부터 확산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CNN은 전했다.

호주 시드니대의 감염병 전문가 에드워드 홈스 교수는 이에 대해 "우한에서 2019년 12월에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했으므로, 바이러스가 그보다 더 전에 오랜 기간 돌고 있었을 것"이라고 CNN에 밝혔다. /연합뉴스

페루 고위층 '백신 새치기'…장관들 잇단 사퇴

페루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새치기'를 한 외교장관이 결국 사임했다.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페루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현지 방송매체에서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백신을 접종한 엘리사베트 아스테테 외교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다.

사가스티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가 중국 시노팜으로부터 백신 2000 회분을 여분으로 받았고 일부 고위 관료들이 이 백신을 접종했다"면서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분들의 노고를 위태롭게 하는 이번 일에 국민들이 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노팜 백신 구매계약을 이끌었던 아스테테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지난달 22일 백신을 맞았음을 시인하면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접종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비리 의혹으로 의회에서 탄핵당한 마르틴 비스카라(57) 전 대통령도 백신을 '은밀히' 접종받았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기 몇 주 전인 지난해 10월 부인과 함께 당시 페루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시노팜 백신을 접종했다.

그는 임상시험에 참가한 것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사실을 비밀에 부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임상시험을 이끈 페루 카예타노 에레디아대 측은 비스카라 전 대통령이 임상시험 참가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필라르 마세티 보건장관도 전 대통령의 백신 접종 사실을 은폐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2일 사임했다. 페루는 지난 7일 시노팜 백신 30만 회분을 받았으며 이틀 뒤인 9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연합뉴스